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3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총 5건)

- ① 국민권익위, 2023년 제2차 G20 반부패실무협의단 회의 참여 ('23.5.25)
- ② 스리랑카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 알린다('23.5.18)
- ③ '기업 청렴윤리경영' 첫 안내서 나온다('23.5.4)
- ④ "한국 옴부즈만 경험, 세계에 알린다"('23.5.9)
- ⑤ '공정채용' 정착 위해 청년층과 소통나선다('23.5.10)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렴정책)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044-200-7619)

국민권익위, 2023년 제2차 G20 반부패실무협의단 회의 참여

반부패 기관 청렴성 증진 등 고위급 원칙 문안 마련 적극 논의

(23. 5. 25. 국민권익위)

이번 달 25일부터 28일까지 인도에서 열리는 2023년 제2차 G20 반부패실무협의단 회의에서 국제 반부패 원칙 마련 논의에 참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2차 G20 반부패실무협의단(Anti-corruption and Transparency Experts Working Group, ACWG) 회의에 참석해 국제사회 반부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G20 반부패실무협의단회의(이하 회의)는 반부패 관련 국제공조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열리는 회의이다. 매년 의장국은 그 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주요 반부패 주제를 선정·제시한다. 이후 회원국들은 논의를 통해 반부패 원칙을 수립하고, 그 성과물을 연말 정상회의의 부속서로 채택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G20 의장국인 인도, 이탈리아를 비롯해 회원국 정부 대표와 싱가포르, 모리셔스 등 초청국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G20 반부패 원칙 마련을 위해 ▲부패 관련 자산회복 메커니즘 강화 ▲부패척결을 위한 법집행 협력과 정보공유 강화 ▲반부패 기관의 청렴성 및 효과성 증진에 대해 논의한다.

우리 정부 대표단도 위와 같은 내용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부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패 위험 평가와 분석에 기반한 정기적인 반부패 전략과 계획 수립 필요성 등 의견을 제시해 반부패 원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G20 반부패실무협의단 회의를 통해 도출되는 반부패 원칙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제 반부패 공조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스리랑카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 알린다

스리랑카 정부 요청으로 이번 달 15~19일 직원 대상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반부패 연수과정 운영

(23. 5. 18. 국민권익위)

스리랑카 정부의 요청으로 종합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제도 등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을 스리랑카에 알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스리랑카 뇌물부패수사위원회(Commission to Investigate Allegations of Bribery or Corruption, 이하 CIABOC) 직원 10명을 대상으로 이번 달 15일부터 19일까지 반부패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스리랑카 CIABOC은 부패사건 수사·기소, 공무원 재산등록심사 등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한 스리랑카의 헌법기관이다.

최근 스리랑카 정부는 기관별 반부패 전담 조직 설치, 부패위험 평가 실시, 신고자 보호 제도 마련 등으로 구성된 「국가 반부패 행동계획」(2019~2023)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동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CIABOC 등 관계기관과 대통령이 임명한 사회 각계의 전문 위원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평가를 수행한다.

이번 연수는 종합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우리나라의 반부패 제도 운영 경험을 배우기 위해 스리랑카 정부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스리랑카의 「국가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 제도 관련 강의·토론·실습·사례발표 등의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또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기반으로 한 스리랑카 최초의 기관별 청렴노력도 평가가 성공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진단하고 취약요인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로 2012년에 유엔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현재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등 5개국은 우리나라의 청렴도평가 제도를 받아들여 공공부문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반부패 정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종합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우리나라의 반부패 제도가 스리랑카의 국가 청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스리랑카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민주주의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부패·거버넌스 분야 기술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진1〉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은 15~19일 닷새간 스리랑카 뇌물부패수사위원회 공무원에 대한 한국의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반부패 정책 연수 과정을 운영했다.



〈사진2〉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은 15~19일 닷새간 스리랑카 뇌물부패수사위원회 공무원에 대한 한국의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반부패 정책 연수 과정을 운영했다. 16일 김상년 청렴연수원장과 스리랑카 공무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3〉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은 15~19일 닷새간 스리랑카 뇌물부패수사위원회 공무원에 대한 한국의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반부패 정책 연수 과정을 운영했다. 16일 스리랑카 공무원들이 강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4〉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은 15~19일 닷새간 스리랑카 뇌물부패수사위원회 공무원에 대한 한국의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반부패 정책 연수 과정을 운영했다. 16일 김상년 청렴연수원장과 교육에 참가한 마유리 야파 스리랑카 법무국 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업 청렴윤리경영’ 첫 안내서 나온다

국민권익위,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핵심 요소인
반부패 규범 대응력 향상 기대”

(23. 5. 4. 국민권익위)

기업이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의 핵심 요소인 반부패 규범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기업용 청렴윤리경영 실천’ 첫 안내서를 상반기 공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제 ESG 공시 및 투자 중요도가 높아지고 국내 기업의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기업용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청렴윤리경영 CP) 안내서를 마련하고 있다.

※ 유럽연합(EU) 지속가능성 정보공시 지침(CSRD), 지속가능 금융공시 규정(SFDR) 등 국제 ESG 공시 기준이 강화되고 2022년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IPEF)가 선정한 4대 의제에도 ‘반부패’ 포함

국민권익위는 국내외 ESG 공시 및 반부패 규범 분석,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안내서 방향을 결정한 후 정책자문단 간담회, 경제단체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전문가·이해관계자와 안내서 초안을 개발하고 있다.

안내서는 기업의 부패유발 요인을 예방·개선하기 위해 공급망 관리, 내부고발 체계 등을 비롯해 ESG 경영 및 반부패 규범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다.

특히 국제 지침·규범 등을 상세히 수록해 기업이 이를 쉽게 파악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방안을 점검표 형식으로 제공한다.

안내서 공개 이후에는 설명회·교육 등을 실시해 국내 기업이 청렴윤리 경영 CP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공개한 ‘공공기관용 청렴윤리경영 CP’ 안내서도 1년간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보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기능), 제5조(기업의 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에 따라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6월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용 청렴윤리경영 CP’ 안내서를 배포했다.

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의 청렴노력도 지표와 연계해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패리스크를 방지·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렴윤리경영 CP 시범운영 및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매월 발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국내 기업이 ESG 경영과 국제 반부패 규범 강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도 기업이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 옴부즈만 경험, 세계에 알린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참석
- IOI 회원가입, 재정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 및 승인

(23. 5. 9. 국민권익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이하 IOI) 아시아 지역 이사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오늘 오후 4시(비엔나 기준 오전 9시)에 개최되는 IOI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2021년 5월 실시된 IOI 아시아 지역이사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13개 아시아 IOI 회원의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 세계옴부즈만협회 (IOI)

1978년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 및 전 세계 옴부즈만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전 세계 125개국 232개 회원이 가입돼 있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본부 및 집행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총회(4년 주기) 및 이사회(매년) 개최

- * 옴부즈만(Ombudsman) : 스웨덴어로 조정자, 중재자, 감시자 등의 의미로, 1809년 스웨덴에서 의회의 대리인으로서 법관과 행정부 공무원들의 법률준수를 감시하는 옴부즈만을 설치한 것에서 유래

이번 이사회는 6개 지역(아프리카, 아시아, 호주·태평양, 카리브·남미, 유럽, 북미)의 이사(옴부즈만) 23명이 참석해 여러 안건을 논의한다.

주요안건으로 ▲IOI 신규 회원 가입신청 심사 ▲2021/2022 감사보고서

및 2023/2024 외부감사 채택 등 재정 문제 ▲2023/2024 지역보조금, IOI 위기 기금 ▲회원자격상실, 회원신청, 회의 없는 결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이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정부와 공직자들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제사회에서도 IOI 회원국들과 한국의 옴부즈만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면서 아시아 및 세계 옴부즈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정채용’ 정착 위해 청년층과 소통나선다

10일 부산광역시청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설명회’에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역할·기능 홍보

(23. 5. 10. 국민권익위)

10일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리는 ‘부산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설명회’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부의 공정채용 정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알리는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한 채용기회의 보장’을 위해 부산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설명회를 계기로 올해 1월 출범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홍보한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위원회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청이 주관한다. 참여기관은 부산혁신도시 이전기관(12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8개), 금융기관(2개), 대학교(13개)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부산광역시청에 마련된 채용설명회 행사장에 채용상담 부스를 마련하고 청년층이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채용과정의 공정성 등에 대해 상담한다.

아울러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는 홍보물과 기념품을 청년층에 배포한다.

특히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이번 채용설명회에 직접 참석해 정부의 공정 채용 정착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청년층이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함께 채용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부패방지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통해 공공부문 불공정 채용을 바로잡아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